광주은행, 지역과 함께 뛴다

❸ 글로벌 은행 도약

세계 100대 은행 진입 멀지 않았다

영업력 강화 … 장기 안정적 수익 기반 확충

윤리·사회공헌 등 국제화 걸맞는 기업 구축

광주은행이 초우량 지방은행을 넘어서 동북아 중심은행, 2050년 세계 100대 은행 진입을 목표로 '글로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우량은행로서 충분한 역량을 바탕으로 광주은행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청사진을 지역민들에게 제시하며 뛰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 목표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된 지역 경제 상황에서 상반기 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특히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밀착경영을 통한 탄탄한 장기수익 기반을 마련하면서 미래비전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2년 연속 최우수 펀드 판매사 선정, 2회 연속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선정, 퇴직연금 수익률 1위 은행 등으로 브랜드 가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외형과 내실을 기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광주은행 모든 식구들은 지난해 실적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다.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기업환경도 지난해보다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광주은행은 올해 목표를 '하이 어닝 서프라이즈(High Earning Surprise)'로 설정했다.

탄탄하게 다져놓은 영업기반을 바탕으로 서울과 전남지역 점포를 늘리고, 영업력을 강화해 당기순이익 3000억원 달성을 확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리스크 관리 강화와 건전성 제고, 중소기업과 리테일(개인소비자) 대한 영업력 강화, 비이자이익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충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민영화 등으로 광주은행이 격동의 중심에 있는 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마케팅과 수익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광주·전남·서울 지역으로 크게 나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구축해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고 있다. 고객의 신뢰, 지역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100년 은행, 세계 100대 은행 진입이 그것이다. 지역우량은행에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 도약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동반성장을 꿈꾸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책임(CRS)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적은 물론 윤리·환경, 사회공헌 등을 아우르는 경영을 펴야 진정한 글로벌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이제 광주은행은 100년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체질을 갖추게 됐다"며 "세계 100대 은행이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지금처럼 혼연일체가 되어 고객을 유정유일(惟精惟一) 즉, 오직 정성스럽게, 오직 한결같이 모신다면 2050년 광주은행의 비전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끝〉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난해 상반기 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광주은행이 우량지역은행을 넘어 글로벌 100대 은행을 목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기준금리 전격 인상 어떤 영향 미치나

서민가계

빚 많은 가계 이자부담 '哭소리'

통화당국이 13일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내리면서 가뜩이나 부풀어 오른 가계의 빚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염려가 확산하고 있다.

살인적인 초저금리 현상으로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대출이자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계의 상환부담은 아직 양호한 편이지만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3월 중 거시 정책수단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3분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는 770조원에 달한다. 2000년대 이후 연평균 약 12%씩 증가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347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약 48%를 차지한다. 비중이 2006년 말 39%에서 9%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은 최근에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작년 12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보금자리론 등 포함)은 3조8000억 원으로 전달의 3조5000억 원보다 2000억 원 증가했다. 여기에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증권업계

주식시장 제한적…유동성 압박 걱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시장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한 데 대해 증권업계는 다소 의외라면서도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리인상보다 원화절상 유도 등 다른 물가대책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연 2.75% 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금리가 추세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부담이 될 순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초 증권업계에서는 정부가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가격을 적극 통제하고 있고 최근 물가압력이 주로 해외 요인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달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왔고 시장도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다"며 "업종별 호불호는 갈리겠으나 전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가 물가상승 억제에 적극 나서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경제단체

물가 잡으려다 경제회복세 둔화되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대해 경제단체는 물가 안정이라는 대의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기업과 가계에 부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준금리 추가인상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물가 불안에 선제 대응하려고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800조원의 가계부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빠른 금리인상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경기회복세가 둔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통화당국이 대내외 경제변수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헤아려 금리 조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업계의 자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인상은 최근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작년 7월 이후 세 차례 금리를 올려 투자심리와 소비가 둔화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전셋값 안정책'에 고추가루 뿌린격

한국은행이 13일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리 인상폭이 크진 않지만 연초들어 매매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매수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전셋값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물가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해도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전형적인 '엇박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들여 만든 전세시장 안정대책에 고춧가루를 뿌린 것과 다름없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으로 매매 시장은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연초 비수기와 맞물려 있고, 지난해 하반기 가격 상승에 따른 견제심리가 확산된 상태여서 재건축 등 투자상품은 가격 하락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2,089.48 (-5.47)
▼ 코스닥지수 534.27 (-1.16)
▲ 금리 (국고채 3년) 3.64% (+0.10)
▼ 원·달러 환율 1,114.20원 (-5.2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 광주·전남 공공 분양·임대주택 입주계획

구분	지구	블록	주택유형				
			계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공공분양
계	92	136	97,313	62,462	2,426	6,506	25,919
광주	7	8	7,707	6,072	0	0	1,635
전남	3	3	1,785	1,785	0	0	0

공공분양·임대 13만가구 앞당겨 공급

■전·월세 대책 뭘 담았나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국토해양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이 도맡아온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 사업에 개인과 민간 건설업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을 많이 담은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짧게는 6개월 만에 완공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을 지으면 국민주택기금을 파격적인 금리(2%)로 지원함으로써 단기적인 공급을 늘리고, 민간이 5년 임대 주택을 건설할 때도 공공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6개월 이상 무주택' 대출 조건을 없애는 등 서민·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가 예상하는 올해 공공 부문의 공급 물량은 13만가구이다.

우선 소형 분양 및 임대 9만7000가구를 공급하되, 봄 이사철 수요에 대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입주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물량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2009년(5만6천가구)보다 4만가구 이상 늘어난 것으로 서울 1만5천934가구, 경기 3만4천735가구 등 수도권이 5만6천526가구이고, 지방은 4만787가구이다.

/연합뉴스